

승자 독식의 한국 정치?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공진성(조선대 정치외교학과)

1.

정치학의 여러 세부 전공 가운데 사실 제 전공은 정치사상입니다. ‘사실’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는 이유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방송과 신문을 통해 한국정치에 대해 발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제 전공을 한국정치로 오해할까 봐서입니다. 한국정치나 비교정치를 전공한 학자가 지방이나 중앙의 정치 문제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지만, 지방의 현실은 그런 전문적 분업을 추구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아서 그저 정치학을 전공했다는 명분만으로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치사상이라는 제 전공 분야가 현실정치(Realpolitik)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현실정치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그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정치사상은 현실정치의 문제를 조금 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다루며, 특히 과거의 사람들이 유사한 문제를 다룬 방식과 비교해 그 지적 계보를 추적합니다. 그 점에서 철학과도 비슷하고 역사학과도 비슷하지만, 철학과도 다르고 역사학과도 다른 점은 사상가가 정치적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지적으로 대응하는 행위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 성격을 띠는 사실을 의식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한때 정치사상사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홉스, 칸트, 헤겔 같은 지적 거인들이 시대를 초월해 나누는 대화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들 역시 현실정치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고도의 추상성을 가지고 다루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론은 시대와 장소를 떠나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처럼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론을 보편적 주장처럼 다루는 일이 지나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플라톤의 정치사상을 이용해 현재의 천박한 정치 현실을 비판하며 바꾸려고 하거나, 그 반대로 현재의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한 원인이 플라톤의 정치사상에 있다며 비판하는 것입니다.

몰역사적 정치사상 연구에 반대해 정치사상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흐름도 등장했습니다. 제 아무리 지적인 거인이더라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구체적인 사람들을 청중과 독자로 염두에 두고서 말하고 글을 쓴 이상, 후대인이 그런 사상가의 말과 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와 구체적 발언의 맥락, 언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이지만, 그런 당연한 얘기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의 일입니다. 물론 여전히 종교 경전을 그런 식으로 독해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듯이 정치사상의 고전을 그런 식으로 독해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사상 고전 텍스트는 결코 콘-텍스트에 대한 이해로 환원될 수 없는 정치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텍스트를 대할 때 비로소 고전이 담고 있는 진리가 온전히 독자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과 함께 한국 현대정치사상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구와 이승만부터 리영희, 박현채, 문익환, 장일순까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의 사상을 위에서 언급한 정치사상 연구의 방법과는 사뭇 다른 방법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것은 일차적으로 정치사상을 어떤 사상가가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가 직면한 도전에 지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정치공동체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인지는 지적 경쟁 속에서 늘 다르게 인식되고, 그래서 또한 늘 다른 처방이 내려집니다. 어느 처방이 옳은 것인지는 그 자체로 결정되지 않고, 사상가가 가진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나 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영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시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해서 꼭 틀린 처방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보관소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처박혀 있던 그 처방이 후대에 다른 사상가에 의해 재조명되어 현실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전-응전 접근법은 정치사상의 역사를 이렇게 역동적인 사상정치(Ideenpolitik)의 과정으로 파악합니다.

한국 현대사 속의 지식인들이 당대의 정치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어떻게 동서고금의 정치사상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며 경쟁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의 정치적 도전 과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에 맞서야 할지가 조금은 분명해질까요?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국 현대 정치사는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래도 사상가는 그런 무모한 지적 싸움에 뛰어듭니다.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2.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적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대응해야 할 도전 과제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르게 구성됩니다. 기후 위기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을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 보는 사람에게 '우리'는 인류일 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을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 보는 사람에게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의 시민들일 것입니다. 경제 위기를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 보는 사람에게 '우리'는 자산가 계급 또는 경제적 인간(homo oeconomicus)일 것이고, 심화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 보는 사람에게 '우리'는 노동자 또는 민중일 것이고, 혐오와 차별을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 보는 사람에게 '우리'는, 물론 명목상으로는 모든 사람일 테지만,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소멸을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 보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물론 국민 전체이겠지만, 누구보다도 지방에 사는 국민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우리'를 다르게 상상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맞이한 정치적 도전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적 도전 과제를 대통령의 무능과 그로 인한 행정권력의 기능 부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국회 의석 독점과 그로 인해 점점 더 강해지는 '내로남불'의 진영논리로 보는 사람도 있으며, 독선적 생각과 폭력적 행동으로 정치권의 양극화를 견인하고 부추기는 강성 팬덤과 유튜브들의 반지성주의 및 포퓰리즘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현재 우리가 맞이한 정치적 도전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지만, 어떤 해석도 지적 헤게모니를 가지지 못한 상황이야말로 가장 큰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작은 우리'[小我]들은 많지만, 그 모두를 포괄하는 '큰 우리'[大我]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도전에 어떻게 맞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생각들이, 그리고 그만큼 더 작은 우리를 동원할 수 있는 생각들이 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비교적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립 후 조선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었을지언정 일단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계급투쟁이 우선하거나 병행되지 않으면, 일본인 자본가의 지배가 조선인 자본가의 지배로 바뀔 뿐이라고 생각한 공산주의자들도 있었고, 우리가 부족해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니 일단 그 부족함부터 먼저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일본의 지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공통의 적과 함께 공통의 우리가 사라졌고, 각자의 적과 함께 각자의 우리가 등장했습니다. 다양한 우리들은 서로 다르게 우리 앞에 놓인 정치적 도전을 인식했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응전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단이었고, 단독정부였으며,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권이었습니다.

3.

며칠 전 강준만 교수는 한겨레 신문에 흥미로운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선택적 과잉 공감'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심리학자, 인지과학자, 진화학자 등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 그 자체가 문제 될 건 없지만,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늘 선택적 과잉 공감을 한다는 데에 있다. 우리 편에 대해선 무한대의 공감을 하지만 반대편에 대해선 공감은 커녕 최소한의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어떻게 해서건 악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미 자기편에 쏟은 무한대의 공감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려고 한다. 심지어 반대편에는 비인간적으로 잔인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준만 교수는 “선택적 과잉 공감이 아예 그 어떤 공감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자신의 희망을 피력합니다.

다소 역설적인 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인간의 정서 작용에 의해 생기는 공감이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공감이 우리를 불편부당하게 만들기보다는 편파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존 롤스의 유명한 ‘무지의 베일’과 ‘원초적 입장’이 판단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생겨나는 편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장치라면,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의 가면은 판단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심사위원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리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자유주의적 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공정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유발하는 또는 그 반대로 반감을 자아내는 각종 차이들에 ‘눈을 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무차별성이 오히려 정의롭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녀의 성별 차이에 눈감고, 사람의 다양한 성적 지향의 차이에 눈감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문화적 공동체들 간의 차이에 눈감고, 종교적 세계관의 차이에 눈감는 것이 오히려 정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자의 차이에 대해 눈감고 판단하는 그가 남성이거나 백인이거나 기독교인이거나 이성애자이거나 비장애인일 것이기 때문이고,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판단할 경우에도, 중요한 차이들을 무시한 정의의 원칙을 그 차이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 속의 다양한 인간들이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모든 인간을 똑같이 가깝게 또는 멀게 대하려고 해도 우리의 정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지평은 무한대로 곧게 뻗어 있지만, 정서적 반응은 동심원을 그리며 더 멀어질수록 더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정서를 가진 공동체, 즉 공감 공동체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서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특별한 수단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에서 대제국의 건설은 기적적인 일이었고, 국민국가의 수립도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모두 법과 제도의 발달,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전, 보편종교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도움에 힘입은 결과였습니다. 이런 수단과 기술을 통해 더 큰 집단이 하나의 정서를 가진 정치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적(敵)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환경이었습니다. 제국의 형성을 위해서는 적대적 야만이

라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했고, 국민국가의 형성을 위해서는 잠재적인 적들로 둘러싸인 국제환경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적대(敵對)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는 것입니다. 문명과 야만을 구분하는 이데올로기가 제국이라는 거대한 우리의 형성에 필수적이었다면, 내셔널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네이션-스테이트라는 또 다른 거대한 우리의 형성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데올로기만으로 자연스러운 정서 공동체를 넘어서는 우리를 형성할 수는 없지만, 이데올로기 없이 그런 우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의 정치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국의 주변부에서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지만, 특히 군사력의 측면에서 약한 쪽이 강한 쪽을 공격할 때 자신이 가진 힘의 비대칭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비대칭적 우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테러(terror)입니다. 물론 과거에 그런 행위들에 '테러'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은 아니지만, 현대의 테러리즘과 동일한 전략적 고려가 그런 행위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테러의 직접적 대상은 그 공격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 대상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즉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공격하는 것이 테러의 최종 목표입니다. 공포의 확산은 그와 같은 공격이 자기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의존하는데, 그런 생각은 '우리' 사이에서 공유됩니다. 다시 말해, 그런 생각과 공포를 공유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테러 전술을 이용해 약자는 군사적으로 우월한 강자에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길 수는 없더라도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격받은 상대와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손쉽게 공포를 주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과잉팽창과 지배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주변부의 위와 같은 방식의 저항은 20세기에 식민지 해방 투쟁과 연결되었고 국민국가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역시 식민지 해방 투쟁의 과정에서 테러의 방식을 이용해 군사적으로 우월한 적에 맞서 싸웠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즉 일본인의 죽음과 피해에 과소공감했고, 조선인의 죽음과 피해에 과잉공감했습니다. 폭력에 대한 공포는 위와 같은 공감의 메커니즘에 따라 차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상황은 해방 후에 달라졌습니다. 잘 알다시피 많은 정치인이 암살당해 죽었고, 남북으로 갈라져 전쟁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이 한때의 '우리'를 그보다 작은 우리와 그들로 나누었고, 우리의 죽음에 과잉공감하고 그들의 죽음에 과소공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족해방과 국민국가 건설을 추동했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보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훨씬 더 강하게 대립적으로 한반도 위에서 작용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데올로기만으로 그와 같은 대립이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지리정치적이고 지리경제적인 이익의 충돌이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표출된 것이기도 합니다. 더 큰 적대와 우리 관념을 내포하는 이데올로기가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작동하자 일제 강점기에 형성되었던 적대와 우리 관념은 약해졌습니다.

4.

전쟁은 다른 수단을 이용한 정치의 연속입니다. 달리 말해, 전쟁은 두 개의 대립하는 의지가 각자의 도덕적 힘의 크기를 물리적 힘을 이용해 시험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수단이 물리적 힘이라면, 정치의 수단은 도덕적 힘입니다. 정치는 대립하는 의지들이 각자의 도덕적 힘(물리적 힘을 이용하지 않고) 겨루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제도화하는 데에 실패하면 정치는

전쟁으로 바뀝니다. 내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사람은 결국 폭력적 수단을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피하려면 언제나 폭력 외에 의지할 다른 수단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같은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뜻이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뜻이 다르더라도 함께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각자의 도덕적 힘을 겨뤄가면서, 즉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정기적으로 가려가면서 함께 국가를 이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정치의 가능 조건은 뜻이 같은 것이 아니라, '함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관건입니다.

물론 '함께할 필요'는 이데올로기적 구성의 산물입니다. 경제적 필요라는 것도 믿는 사람에게 '함께할 필요'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럴 필요가 되지 못합니다.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할 필요가 있는지는 정해져 있는 사실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집단적 해석의 문제입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함께해야 한다, 같은 국민이니까 함께해야 한다, 동맹이니까 함께해야 한다, 같은 종교를 믿으니까 함께해야 한다, 공동의 이익이 있으니까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은 주어진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적 도전 과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본적인 의미의 정치적 경쟁은 바로 이 해석 경쟁입니다. 왜 우리가 설령 다양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과 함께 공동의 도전에 응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경쟁입니다. 이 해석 경쟁의 결과에 따라 더 큰 우리가 구성될 수도 있고 더 작은 우리가 구성될 수도 있으며, 이런 우리가 구성될 수도 있고 저런 우리가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 즉 대립하는 의지들이 각자의 도덕적 힘을 겨루는 싸움은 이렇게 구성된 '함께할 필요'를 느끼는 우리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의 근본적 문제는 더 큰 우리를 상상하게 만드는,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할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패권적 이데올로기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떨어져 사는 사람들을 함께할 필요를 느끼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함께할 필요를 느끼게 만들 수 있는 패권적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한국에서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과거의 패권적 이데올로기는 그 힘을 잃었고 아직 새로운 패권적 이데올로기는 등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낡은 것은 가고 아직 새것은 오지 않은' 일종의 궤위 상태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직 폭력적 내전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도덕적 힘이 아닌, 거의 물리적 힘에 가까운 수단으로 자기 의지를 상대에게 관철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두 개의 정당이, 그리고 광주와 대구로 대표되는 두 지역에서 서로 다른 정당이 선거의 승자가 되어 각각 그 지역의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을 문제 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5.

사고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정치개혁 법안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사고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로 바뀌고, 한 선거구에서 4~5명의 의원이 선출됩니다. 한 정당이 한 지역구에서 공천할 수 있는 후보의 수를 제한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당선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출되는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석에서 127석으로 줄이고 나머지 의석을 권역별 비례대표 방식으로 배분한다면, 영남과 호남에서의 정당 득표율이 지난 21대 총선 때와 같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특정 정당의 독점이 강했던 두 지

역에서도 여러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전국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확실히 과거에 비해 양대 정당의 의석 독점은 약해질 것이고, 지금까지 득표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의석을 배분받았던 정당들이, 물론 여전히 100% 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할 때보다는 적더라도, 조금 더 많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해 지역정당을 설립할 수 있게 하면, 예컨대, 국민의힘에 대해 여전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호남의 보수적 유권자들이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새로운 보수정당을 국민의힘 대신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고 국고보조금도 소수정당에 조금 더 많이 배분한다면, 소수정당들이 국회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영남과 호남에 기반을 둔 양대 정당의 국회 의석 독점은 깨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역적 일당 독점과 전국적 양당 분점을 깨고 다당제 상황을 만들려면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연구해보라고 용역을 맡겼다면, 아마도 이런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과연 현행 제도하에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양대 정당이 당론으로 이런 정치개혁에 동의할까요? 지역구 의석 전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다가 한 선거구에서 4~5명을 선출한다면, 광주와 전남 전체가 두 개의 지역구로 나뉘게 될 테고, 그러면 한 정당이 공천할 수 있는 후보의 수를 의석수보다 적게 제한하지 않더라도 절반 이상의 현역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포기해야 할 텐데, 과연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할까요? 법안의 통과 가능 여부를 떠나 이 선거제도와 이 제도가 가져올 다당제 의회는 과연 대통령제와 친화적일까요? 현재의 양당 체제와 소수정당 부진은 그야말로 승자독식인 대통령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선거제도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게 될 다양한 정당들은 정말 국민의 다양한 의지를 대표하고 반영하게 될까요?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면, 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요? 승리한 정당의 독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승자와 강자의 독식이 문제는 아닐까요? 승리한 정당의 독식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정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승자와 강자의 독식 문제도 함께 해결될까요?

승자와 강자의 독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천 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 공천해왔습니다. 그런 기획공천은 마치 승자와 강자의 독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사실 임박한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후보 전술에 불과했습니다. 당의 지지기반을 확장하고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당들은 당의 확장된 외연을 허구적으로 상징하는 몇몇 인물들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몰두하는 위계적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의 정당들이 이런 의심을 벗을 수 있을까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만 개혁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정당들도, 정치인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기득권은 도전에 의해 깨지는 것이다, 새로운 인물을 찾으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 영남이나 호남에서도 거저 당선되는 것은 아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기는 것이 본선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등의 말입니다. 맞습니다. 갈수록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중독에 가깝게 과도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더 큰 우리'를 만드는 정치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적고, 심지어 그런 정치를 위해 자신을 바치려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는 대립하는 의지를 가진 집단들이 도덕적 힘을 겨루는, 즉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진지하게 따져 묻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따져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따질 능력도 의지

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같은 의지를 가진 내집단끼리만 옳음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외집단의 옳지 않음은 선형적으로 확신하여 폭력에 가까운 공격을 가하면서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오로지 정치인들 탓만은 아닙니다. 매체의 파편화, 사회 전체가 보이는 단기적·부분적 이익 추구 경향, 그리고 그로 인한 정치의 사사화(私事化) 흐름을 정치인 개인이 혼자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승자 독식을 문제삼는가? 선거에서의 승자 독식이 사라지면 사회에서의 승자 독식도 사라지는가? 의회에서건 사회에서건 승자 독식의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함께할 필요를 느끼는 '우리'가 될 수 있는가?